

군산시,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

어청도 해역 총사업비 10.7조원 대규모 사업 추진... 일자리 · 경제 활성화 기대

군산시(시장 권한대행 김영민)가 추진해 온 어청도 인근 해역 1.0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구역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16일 지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10.7조원, 사업기간 2026년부터 2033년까지인 대형 프로젝트로, 군산시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낸 쾌거로 평가된다.

군산시는 2022년부터 해상풍력 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어청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발전단지 조성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역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해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총 18차례 개최하여 사업 대상지와 추진 방향, 상생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주민설명회, 어촌계 방문 간담회, 각종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에 힘써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해왔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자체가 계획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추가 REC 가중치 등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군산시는 지자체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아 최대치인 0.1의 추가 REC 가중치를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연간 약 225억원, 20년간 약 4,50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기대된다. 이 재원은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도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지원금은 20년간 매년 약 2.6억, 특별지원금은 약 1.65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를 합하면 약 1,700억 원이 추가 사업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해상풍력 블레이드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상풍

력을 제조·소재·연구개발과 연계된 산업 기반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중심으로 물류 및 설치 지원 여건도 갖춰지고 있어 관련 산업 확장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총사업비 10.7조 원 규모의 사업 추진으로 기존 조선·자동차 중심의 제조업 인프라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는 올해 말까지 해군·공군·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 구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발전사업자 공모 절차를 추진하고,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발전지구 전환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김의겸 전 새만금청장, 군산 재선거 출마 선언 “군산 대도약 기회 꼭 실현”

현대차 새만금 투자 조선소재가동 기반 새만금 RE100 산단 추진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군산의 대도약 기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군산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경제는 한국자립 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무너진 군산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로봇·수소 산업 중심 대규모 투자 계획과 군산조선소의 새 주인 확보 등을 언급하며 “지금 군산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왔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린다면 군산은 개항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도약과 번영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미래 산업이 집적될 것이라며 로봇 산업과 수소 산업, 조선 산업이 함께 성장하면 군산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고 RE100 산업단지로 지정받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국내외 기업들이 군산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은 “현대차 투자 유치를 위해 청와대와 협력하며 정책 조율을 해왔고 현대차 경영진과도 긴밀히 의견을 나눴다”라며 “새만금개발청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지원을 통해 군산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익산 로컬푸드 농가 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18일까지 익산시청서, 판로 막힌 농가 위해 긴급 지원사격... 딸기 · 방울토마토 · 계란 · 고구마 등

익산시가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의 위탁 종료로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린 농가들을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16~18일 3일간 익산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업인 돕기를 위한 ‘익산 로컬푸드 농가 상생 직거래 장터’를 긴급 운영한다.

이번 장터는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의 계약 종료와 기존 운영 주체의 무단 점유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해진 농가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품목은 현재 출하가 가장 시급한 딸기를 중심으로 방울토마토, 계란, 고구마 등이다. 시는 시청 방문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지역 농산물을 선보여 농가의 재고 부담을 즉각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장터를 시작으로 출하 농가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필요

요시 추가 장터를 개설하는 등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공직사회 · 시민과 함께 ‘군산바다 지킨다’

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대응 총력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해상 자치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긴급 공직사회와 시민이 하나로 뭉쳐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중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전국적인 해상 행정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는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하여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전’의 원칙에 따라 국가 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업면허, 공유수면 관리 등 전국의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제5조(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에서는 이러한 ‘중전’의 원칙



이 제외되었고, 특히 부칙 제4조에는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확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 문제와 맞물려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수십 년 간 군산시가 어업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명백한 ‘군산의 바다’임을 강조하며,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우선 긴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안의 독소 조항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해 행정의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이번 사건이 지역경제와 직결된 생존권 문제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안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금강미래체험관서 동물 사체 종량제 봉투 배출 논란

폐사 기록 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부적절 사체 처리 의혹

군산의 대표 생태교육시설인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재조방대)이 폐사한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 온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수백 마리에 달하는 동물의 행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데다 폐사 기록 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시설에서 수년간 부적절한 사체 처리와 개체 관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체험관 측은 자연 폐사하거나 병사한 조류와 일부 동물 사체를 정식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일반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담당 부서는 취재 초기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분홍색 시트소각용 봉투에 담아 소각시설로 보냈다”고 해명을 반복했다.

그러나 두 설명 모두 사체 처리 과정이나 위탁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나 자료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미래체험관 과 같은 공공 전시·체험시설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가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잔여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

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동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처럼 배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전문 소각시설이나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사육 동물 관리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험관 사육담당자 설명에 따르면 과거 약 800마리 수준이던 사육 개체는 현재 독수리와 수리부엉이 등 29종 173마리만 남아 있는 상태다.

체험관은 그동안 144마리를 조류보호협회와 동물원 등에 이관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약 480마리 이상의 개체 행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과거 여러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2017년 당시 체험관 사육 개체는 75종 500여 마리로 파악됐다. 현재 수치와 비교해도 그동안 최소 46종 183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해당 부서조차도 정확한 사육 현황과 개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체험관 관계자는 “대부분 자연 폐사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폐사 원인이나 사체 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류 폐사 시 전염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 절차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각한 방역 공백으로 보고 있다. 금강 하구는 철새 이동 경로와 맞닿아 있어 조류인플루엔

자(AD) 등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금강미래체험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시설로, 전사 동물이 폐사할 경우 폐사 원인과 처리 방법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이를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취재가 이뤄지자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체 처리 방식과 개체 관리 부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익산시, 스마트 교통 도시 조성 본격화

KTX 익산역 약 10km 구간 첨단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

익산시가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에 본격 착수하며 시민 체감형 스마트 교통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익산시는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KTX 익산역과 주요 도심 거점을 연결하는 약 10km 구간에 첨단 자율주행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영철 건설국장을 비롯해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와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실시 및 확정 설계를 마무리하고, SK텔레콤 컨소시엄과 곧바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차량과 도로 간 실시간 통신(V2X)을 위한 ‘자율협력

주행 인프라 구축 △차량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자율주행 관제센터 구축’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하는 ‘신호개방 서비스 도입’ 등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시민들이 직접 자율주행 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원광대~익산역~익산시외버스터미널 구간(4.8km)에서 시범 운행을 할 예정이다. 2028년에는 배산체육공원~익산역~전북대 특성화캠퍼스 구간(5.1km)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실증 운행된다.

이번 사업은 SK텔레콤의 초정밀 통신 인프라 기술과 라이드플렉스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익산시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심 교통환경에 적용하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실증 사례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의 맛 찾는다’ 향토음식점 공개 모집

익산시가 지역 고유의 맛과 전통을 담은 향토음식점을 모집한다. 시는 지역의 미식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6년 익산시 향토음식점’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된 7가지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조리·판매하며 2년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이다.

대상 메뉴는 △순두부찌개 △오리활효구이 △우어회 △마약밥 △육회비빔밥 △마미떡볶음 △고구마순댓가장 등이 다.

선정된 음식점에는 향토음식점 인증 표지판 부착, 위생·서비스 개선 물품 지원, 관광·미식 관련 홍보물 등재, 상수도 요금 3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미식위생과(063-880-578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3자녀이상 가구에 패밀리카 무료 렌탈 지원

군산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를 돕고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 지원 사업’을 17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세 명 이상의 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 중 1명 이상이 만 10세 이하(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이다.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선정된 가구는 연 1회, 최대 4일간 7인승에서 12인승 사이의 패밀리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차량 렌탈 비용은 군산시가 전액 지원 한다.

신청은 차량 이용 희망일로부터 최소 3주 전에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군산=김민호 기자

‘퇴근 후 승마’ 익산시 야간 승마강습 운영

익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승마 인프라를 활용해 승마 대중화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의 승마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 승마강습’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야간 승마강습은 낮 시간 승마 강습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평일 저녁 시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맞춤형 여가·체육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습은 익산시 공공승마장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총 4개 기수로 운영된다. 기수당 5명씩 총 20명을 모집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7일부터 29일까지 익산시 공공승마장(강변로 1105)을 방문하거나 전화(063-882-7871)로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주 2회, 5주 과정 총 10회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40분간 진행된다. /익산=이재훈 기자